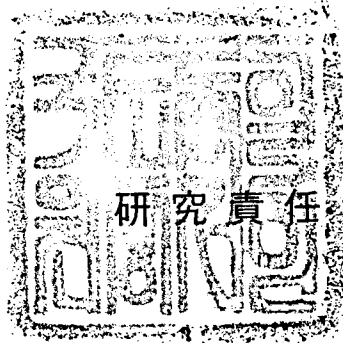


'89신진학자통일연구

北韓의 周邊環境變化와 統一問題

1989



研究責任者 : 이길주(外國語大)
김용호(서울대)

國土統一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統一 및 北韓 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研究結果 報告書 입니다.

本 研究는 소련에서 진행중인 改革·改放政策의 理論的 배경인 「新思想」이 北韓의 對內外 政策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였으며, 그리고 日本의 對北韓 關係개선 노력과 可能性을 전망하고 난후 우리의 對應策의 모색을 考察하였습니 다.

이 冊字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參考資料로 적극 活用되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받 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 니다.

1989.12.

調 査 研 究 室

소련의 신사고와 개혁·개방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이 길 주 (外國語大)

要 約 文

1. 「새로운 思考」의 등장 배경

가. 「새로운 思考」의 政治的 개념

- ② 社會主義의 資本主義에 대한 相互의존성 중시
- ③ 절대적인 安全保障에서 相互安全保障으로 전환
- ④ 군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政治的, 經濟的, 인도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외교의 복합적 접근중시

나. 최근의 「새로운 思考」의 발전

- ② 전인류적인 가치를 國家, 階級, 이데올로기에 우선한다.
- ② 「3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두 사회체제간의 대립, 미·소간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함
- ③ 蘇聯의 대외정책의 기본의 하나는 탈이데올로기이다.

다. 「새로운 思考」의 등장배경

- ① 「힘의 상관관계」가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 진영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있다는 불안한 인식
- ②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초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소련이 초대강국에서 2등국가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2. 蘇聯의 대한반도정책의 신전개(최근 蘇聯의 새로운 對韓정책)

- ② 한반도에 두개의 主權國家가 存在하는 현실 認定
- ② 民族共同體統一방안 긍정적으로 評價
- ② 蘇聯은 韓國의 유엔단독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 ② 平和보다 統一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3. 蘇聯의 改革政策과 「새로운 思考」

가. 蘇聯經濟改革의 방향

- ② 企業의 자주성, 자기결재, 자기 자금조달, 자기관리
- ② 市場經濟原理의 도입과 완전한 獨立採算과 자기자금조달제 실시

나. 주요經濟改革

- ② 合作企業法(1987. 1)
- ② 개인기업법(1987. 5)
- ② 國營企業法(1988. 1)
- ② 協同組合法(1988. 7)

4. 「새로운 思考」와 북한과의 갈등

가.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문제

- ② 최근 소련의 계급투쟁을 부정함으로써 북한의 「남조선해방론」과 배치됨

나. 韓國의 유엔가입문제

- ② 소련이 최근 韓國의 유엔가입에 대한 불반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評價
- ② 이로 인해 모스크바 방송과 평양 방송이 論爭을 展開

다. 소련의 북한에 대한 경제개혁 압력

- ② 市場經濟原理를 도입한 소련의 經濟改革은 北韓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
- ② 특히 소련에서 추진중인 농업개혁, 농지의 농민에의 임대는 북한에 충격을 주고 있음
- ② 소련, 對북한경제관계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요구

최근 소련의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5. 北韓의 변화가능성

- ② 사회주의국가는 무조건 善, 資本主義國家는 무조건 惡, 노동자는 무조건 善, 자본가는 무조건 惡 이라는 黑白論理에서 탈피하여야 함
- ② 특히 北韓의 경우 김일성 偶像化에 의한 「全能의 傲慢」과 「主體思想」에 의한 「眞理의 獨占」에서 탈피하여야함.
- ② 최소한 北韓이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현실인정」을 할 때만이 통일의 가능성은 열릴 것임.

目 次

1. 「새로운 思考」의 등장 배경	3
2. 蘇聯의 對한반도 정책의 新전개(최근 소련의 새로운 對韓정책)	8
3. 蘇聯의 改革政策과 「새로운 思考」	15
4. 「새로운 思考」와 북한과의 갈등	22
5. 北韓의 변화 가능성	26

1. 「새로운 思考」의 등장배경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의 전개과정에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VKA), 글라스노스찌(GLASNOST)와 더불어 등장한 노보예 뮈슬레니예(NOVOE MYSHLENIE)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중요시하며 종래의 社會主義와 資本主義간의 敵對的 對立과 階級鬭爭概念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다.

① 나아가 이 「새로운 사고」가 현재 소련에서 진행중에 있는 개방 개혁정책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를 통해서 개발된 이론이 실제 소련의 대외정책, 특히 對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

노보예 뮈슬레니예(NOVOE MYSHLENIE)를 우리 말을 직역하면 「새로운 사고」가 되나 이것을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의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환」이라기보다 「새로움」에 초점이 놓여있으므로 「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본제에서는 통례를 따라 「새로운 사고」라고 하기로 한다.

여태까지 나타나 있는 「새로운 사고」의 정치적 개념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호의존문제

• 오늘날의 세계는 개개의 주권국가의 틀을 넘어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 상호의존은 단지 국가의 틀을 넘어 공통의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의 차이를 초월하는 그로발(Global)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② 상호안전보장문제

• 핵시대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은 생존에 대한 상호의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은 일반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안전보장 밖에 없다.

•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이 저하하여도 소련에 유리 하다고 말할 수 없다. 불신감이 생겨 안전을 해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외교의 복합적 아프로우치(approach)

• 국제적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군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여태까지 무관심했거나 제국주의의 야심을 갖는 것으로 비판되었던 국제조직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최근에 와서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고 있다.

① 인류문명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쉰인류적인 가치(핵전쟁방지, 인류의 생존, 환경오염방지등)를 국가, 계급, 이데올로기에 우선시켜야 한다. 이로부터 생명이 고갈된 힘에 의한 정치는 용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온다.

② 그동안 강대국들은 UN에서나 UN밖에서 협력을 하기보다는 경쟁을 하여 분쟁을 지구적인 대립의 경지로까지 몰고가곤하였다.

③ 「3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두 사회체제간의 대립, 또는 미·소간의 경쟁이란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소련의 대외정책의 기본의 하나는 탈이데올로기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① 사회체제를 초월하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② 국제분쟁을 두 체제간의 대립, 미·소간의 대립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고 ③ 소련 스스로가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이탈을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리전개가 얼마나 대담한, 과거로부터의 이탈인가는 브레즈네프시대의 「평화공존」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당시의 「평화공존」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수 있다.

① 평화공존은 계급투쟁의 한 형태이다.

② 平和共存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고 해도 帝國主義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따라서 평화공존은 세계의 두 사회체제간의 적대가 중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소련의 정책목표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이데올로기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 분야에서의 중립이나 평화공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오히려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와의 경쟁과 계급투쟁에 있어 이데올로기투쟁이 같고 의의는 증대되고 있다.

④ 계급투쟁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화공존이란 모든 인민들의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에 불가결한 조건을 조성하는 정책노선인 것이다.

브레즈네프의 「평화공존」에서는 두체제간의 대립과 투쟁, 계급·이데올로기 투쟁을 고취하고있는데 반해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에서는 이들 명제로부터 이탈하거나 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에서 과거 브레즈네프의 내정과 외교정책의 실패에 대한 批判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은 「10월혁명」 70주년 紀念演說에서 소련의 역대 執權者였던 스탈린, 흐르시초프, 브레즈네프에 대해서 辛辣한 批判을 가하였다. 여기에서 브레즈네프에 대한 비판을 보면 「그의 萬年에 있어서는 진부한 방식, 그리고 새로운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도식주의가 일층의 전진을 크게 저해하였다」는 것이며 「경제에서 부정적인 프로세스(process)가 증대하고 사실상 위기직전의 상황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잠깐 닉슨·키신저와 브레즈네프시대의 데탕트(detente)에 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닉슨과 키신저가 추진한 데탕트정책의 배경에는 미국이 군비관리증을 통해 소련의 일반적인 군비증강을 저지하는 것, 소련을 서구와의 경제적

의존관계의 방속에 끌어넣음으로써 소련의 대외정책의 온건화를 도모한다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한편 당시 브레즈네프 외교가 테탕트에 건 기대는 닉슨과 키신저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첫째, 소련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의 상관관계」가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이른바 「역사적 필연성」을 믿고 있었다.

둘째는 이 「힘의 상관관계」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소련의 군사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균형」이라는 현실을 안정한다는 것은 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수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셋째는, 미국과 서구가 쇠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이야말로 3세계에 대해서 공세를 가해야 할 때이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외교가 수행되면 될수록 미국은 더욱 더 3세계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은 테탕트에서 전혀 상반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결국 소련의 군비경쟁과 3세계에 일어서는 소련의 팽창주의라는 두개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의 역학관계를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로 양분해 놓고 이 두 체제간의 경쟁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1961년 10월에 개최된 제22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흐르시초프가 1970년대 가서 광공업생산면에서 미국에 따라잡고 1980년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호언한 것도 위와 같은 낙관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대대로만 움직여지지 않았다. 스탈린시대의 강제와 공포정치로 도움으로 급격하게 공업화된 소련경제는 1950년대 말까지는 그런대로 높은 성장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소련의 GNP의 연평균성장율은 6.7%(소련의 공식발표는 10.2%)나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에 와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1959년부터 소련경제성장은 둔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60년대의 GNP의 연평균성장율은 5.4%로 떨어졌다.

이것은 소련이 초기의 단순한 경제구조에서 다양화한 경제구조에로의 移行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즉 양에서 질에로의 전환에 소련경제가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66년부터 이른바 「고시기경제개혁」이라는 것이 실시되었으나 당권의 강화, 군사비증대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70년대전반의 GNP의 연평균성장율이 3.8%로 하락하고 후반에는 2.8%로 떨어지고 말았다(공표된 숫자는 공업생산에서는 1970년대전반이 5.7%, 후반이 4.5%) 고르바초프가 「10월 혁명」70주년 기념연설에서 「위기직전의 상황」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를 두고 한 말이다.

경제성장의 침체를 가져온 최대원인은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65-70년의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성장율은 1.3%였으나 1971-75년에는 0.1%가 되고 1976-80년에는 마이너스 0.3%가 되었다.

이상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의 배경에는 「힘의 상관관계」가 이미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진영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레이건대통령의 집권하에 박차가 가해진 미국의 군비증강은 1970년대 소련이 획득한 「균형」상태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낳게하였다. 한편 브레즈네프시대 소련의 군비증강은 미·중의 접근을 가져오게하고 NATO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촉진시켰다.

이외에도 1979년이래 폴랜드의 정치적 위기는 소련의 정치적 취약점과 한계를 노정시켰으며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무력개입은 미군의 월남전개입을 방불케 하였다. 더욱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있어서의 미증유의 경제적 침체와 최악의 경제상태는, 이를 그대로 방임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소련이

최대강국은 커녕 2등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새로운 사고」인 것이다.

2.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의 신전개

1989년 6월 13일 모스크바방송은 한반도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에는 사실상 두개국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태까지 북한만을 인정하고 있는 소련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소련의 대한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듯 획기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의 그간의 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지금도 1986년 7월 28일의 고르바초프서기장의 블라디보스토르크연설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을 토의 함에 있어서 같은해 4월 23일에 나온 아·태지역국가의 공동협력에 관한 소련정부의 성명을 흔히 지나쳐 버리기가 쉽다.

이 정부성명이 지금에 와서도 주목되는 까닭은 이미 그 속에 수개월후에 있게될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르크선언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대아시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이례적으로 정부성명의 형식으로 천명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보아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르크선언은 사전에 치밀한 연구와 계획하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련정부성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소련이 이 성명을 통해서 이념과 정치체제를 달리하는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논리를 최초로 제시하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논리를 보면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은 정치체제, 이념과 세계관의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해 관계의 공통성을 갖고 있으며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들 국가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단독으로, 또는 고립된 구름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회·정치체제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지역국가들의 건설적인 노력의 통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밑에 이 성명은 분쟁의 해결, 상호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가져오게 하기위한 2국가간, 다국가간에 협의회와 이러한 방법에 의한 「술아시아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태평양에 있어서의 안보문제의 토의결정에는 희망하는 모든 국가간 마땅히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성명은 또 이지역의 모든 이해당사국에 무역·경제, 기술, 과학, 문화협력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협력문제는 복잡다양하며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장기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적인 로비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한 모든 이해당사국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이 구상은 현존의 UN조직과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틀속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은 이 성명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제국과의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에서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은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공업과 농업기지의 성장, 바이칼-아무르간선철도의 완공, 풍부한 석유가스, 석탄과 기타 에너지자원의 개발, 새로운 원목자원의 존재는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의 국제분업, 무역·경제와 과학·기술협력에 소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완적이고도 중요한 전제조건을 객관적으로 조성해주고 있다.

둘째 소련은 이 지역세계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이들 목적을 위해서 소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제 및 과학·기술적 잠재력을 이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1986년 7월 28일에 있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은 그 내용상 ① 소련극동지역의 경제개발 ② 세계정세 및 아시아·태평양정세에 대한 평가

③ 對중공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안의 3개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再음미해 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복잡한 문제들은 소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소련은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국가이다.

㉒ 소련 극동지역의 經濟開發은 아주낙후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지역을 고도로 발전된 인민경제의 복합기지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극동지역개발 7개지침을 제시한다.

㉓ 극동지역은 광범위한 천연자원과 사회적, 경제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다.

㉔ 수출가능성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소련의 수출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몫은 적다. 합작기업을 비롯하여 태평양연안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개발하여야 하며 전문화된 수출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㉕ 때가 되면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방하여 커다란 국제적 중심지의 하나,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 페스티발과 스포츠대회, 회의와 심포지움의 도시로 만든다. 즉 블라디보스토크를 명실상부한 국제항으로 개발 발전시켜 「태평양을 향한 창구」로 만들고자 한다.

㉖ 가까운 목표는 아니더라도 태평양에 관심을 갖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헬싱키型的 「太平洋會議의 開催」를 제의한다.

이상의 예문이 말해주듯이 蘇聯歷史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대한 구상이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방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항으로 개발·발전시켜 「太平洋을 향한 窓口」로 만들겠다는 遠大한 의욕까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표트르大帝(1721~)가 페테르부르크 (지금의 레닌그라드)를 건설하여 이를 「발틱해를 향한 창구」로 개발했던 大役事를 연상시키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 연설에서 태평양연안국들에 대해서 향후 소련과의 협력을

호소하기 위해 「모든 旗는 우리의 손님으로 올지어다」라는 러시아의 大詩人 아렉세이 세르게예비치 푸쉬킨의 詩句까지 인용하고 있다.

최근 소련에서도 태평양시대의 到來를 예견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아시아·태평양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이렇듯 원대한 아시아·태평양정책구상을 제시한데에는 이에 사전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1988년 3월 25일에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국가위원회」의 창설이다. 새로 생긴 이기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모든 국가, 다시 말하면 한국, 대만등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창설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우선 이 국가위원회의 창설취지를 보면 소련의 개혁정책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思考」가 국내개혁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 국가위원회는 「새로운 思考」의 정신으로 소련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학자, 실무자, 산업과 정치기관의 대표들을 규합할 것이다.

② 아시아·태평양국가인 소련연방은 이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이익, 지상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구상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관계의 훌륭한 발전은 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상호이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③ 아시아·태평양의 지역국가들은 생태, 에너지, 보건, 교육, 해양자원의 개발, 우주공간의 산업적 이용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의 해결은 단독, 또는 고립된 집단의 힘으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주 불가능한 것이다. 소련은 경제적, 과학 및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공동개발계획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④ 이러한 공동개발계획은 태평양 연안국가인민들의 생활을 가치 있고 안정된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지역적인 분업에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소련의 실제적이고도 광범위한 참여는 우리 나라 전체 인민경제, 특히 소련극동지역의 인민경제발전에 활력이 될 것이다.

⑤ 소련의 극동은 커다란 잠재성이 있으며 이 국가위원회의 과업은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극동지역을 고도로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⑥ 이 경우 낡은 도식과 상투적인 定型은 과감히 거부하고 새로운 협력형태를 모색하며 다른 지역국가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새로운 思考의 정신으로 ……」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바와같이 「과거의 낡은 도식과 상투적인 定型은 과감히 거부」한다는 지적도 「새로운 思考」에 기초한 발상으로서 소련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흥공업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함에 있어서 사회체제와 이념의 차이, 외교관계의 유무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1988년 9월 27일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이 UN총회연설에서 「국제관계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의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평화공존은 계급투쟁의 하나의 특별한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탈이념을 선언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케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레즈네프시대의 「평화공존」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思考」의 명백한 외교정책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나온 것이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룩하기 위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고 한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언명이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은 1988년 9월 16일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노동자 및 관리들에게 한 연설에서 태평양지역의 안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7개항의 평화안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의 핵무기동결과 해공군력의 감축을 논의하기

위해 태평양지역의 주요 군사강국들간의 다국간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후 위와 같이 말하였다.

물론 上記 고르바초프의 한국관련 발언내용은 짧으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소련의 최고책임자가 최초로 한국(남조선이라고는 하였지만)을 지칭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며 둘째, 다름 아닌 '88서울올림픽개최를 하루 앞두고 고르바초프의 이 언명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련이 한국과의 경제 관계수립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이후 한·소간의 경제교류는 급진전되어 1988년의 교역량이 2억 9,000만불, 금년상반기에만도 2억불로 증가하여 금년 1년간에는 4억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4월 3일에는 소련상공회의소가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초대소장에는 V.K. 나사로프가 취임하였다. 이와 때를 거의 같이하여 소련정부기관지 「이즈베스찌야그지」는 4월 13일 석간에 동지기자 취재한 장문의 한국현지르보를 게재하고 「서울의 변혁은 다이내미즘에 넘쳐 있으며……그발전은 경제적 기적」이라고 한국경제를 절찬하였다.

그러나 하면 금년 5월 10일자 「이즈베스찌야그지에 「현대」자동차광고가 최초로 게재되는데 이어 9월 12일자에도 게재되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금년 소련의 대한관계에서 피크를 이룬 것은 9월 1일자 「이즈베스찌야」지에 실린, 한국과의 외교관계수립을 촉구한 논문이다. 「한반도의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하에 F. 샤프시나(소련과학 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군대사연구)가 집필한 이 논문은, 그녀의 말대로 「새로운 思考」에 입각해서 한반도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일 중요한 것은 남조선국가가 이미 40년이상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 「우리는 오랜 동안 소련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의 정책이 없었으며, 우리는 심지어 한반도내부의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의 동맹인 북한의 노선을 기계적으로 지원만을 하여왔다. 예를 들어 소련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남과의 접촉을 오랜동안 완강하게 거부하여왔던 것이다. 몇몇 다른 사회주의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이러한 접촉(간접적인 것을 포함하여)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때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 「남조선과의 경제관계를 시작한 현재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앞으로 더 나가지못하며,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넓히고 강화해주며 우리의 극동국경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촉진해주게되는 나머지 모든 방향에서의 남과의 관계설정을 못하고 있다. 남에 대한 인정은 이것은 새로운 정치적 사고의 방향에 서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줄 것이다.

- 「시간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과거의 모든 경험을 창조적으로 보편화하여 북한과 전체 조선민족의 이익과 요구, 이 지역의 평화사업과 우리의 국가이익을 고려하는, 종래와는 다른 조치와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중의 하나가 소련에 의한 남조선의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남조선과의 외교관계의 확립이 타당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 개인적으로는 한결같이 「YES」라고 대답하는 바이다.」

이후 소련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한반도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10일 관영 모스크바방송은 노대통령이 밝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평양의 입장을 고려하는 요구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건설적이다」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금년에 들어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소련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한반도에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소련은 한반도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존중할 것이다(이 말에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만이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 소련은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 평화보다 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여태까지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소련의 일방적인 지지만을 받아온 북한에게 있어서 위와 같은 소련의 새로운 대한정책의 모색은 폭탄선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소련의 평화압력에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매우 주목이되며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3. 소련의 개혁정책과 「새로운 思考」

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소련사회의 침체가 더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금의 초대강국의 지위에서 물러나 2등의 주변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정책의 목표는 소련 국가경제의 활성화, 즉 현재의 경제성장을 약 3%를 5%정도로 끌어올리는데 두고, 여타 분야에서의 개혁은 이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 현재 소련에서 민족분규, 광부들의 대대적인 데모, 민주화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은 소련경제가 회생키 어려운 난국에 처해있는데 근본원인을 두고 있다.

제12차 5개년계획(1986-1990년)에어 연평균경제성장의 목표가 4.2%로 되어있었으나 실적은 그에 못미치고 있다. 공표숫자에서의 연평균성장율은 1986년이 4.1%, 1987년 2.3%, 1988년 4.4%, 1989년 1~ 3월 4%로서 1987년이외에는 성장이 높다. 그러나 이 숫자는 은폐로 인플레이(연8-10%)를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88년의 경제성장율은 1.5%정도 이거나 제로성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에 와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붕괴」설이 나오는가하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도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설이 등장하고 있다. 소련의 경제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思考」에 의한 개혁이 가장 필요한 곳이 경제분야이다.

소련의 중앙집권계획시스템의 경직성을 완화해 보려는 「경제개혁」은 1960년대 후반 브레즈네프시대의 초기에 시작하여 1970년대초에도 실시되었다. 따라서 브레즈네프정권하의 경제개혁도 이러한 선례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고르바초프는 당초 중앙집권계획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경제개혁이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부문의 계획·관리기구의 정비와 임금, 뽀나스제도의 개혁, 음주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규율의 강화가 개혁 정책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곧 그 정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근본적으로 경제기구를 변혁하는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1987년 10월혁명 70주년기념식전에서의 보고에서 고르바초프서기장은 「앞으로 2-3년이 가장 복잡하고 열광적이며 동시에 어느 정도 위기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라는 용어는 개혁시대가 시작되었다는 1985년 4월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총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거기에서는 완성(SOVERSHEN STVOVANIE), 개량(YCYCHSHEHIE)등의 말이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현실이 필요로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 반복적인 개혁과 개선이 아니라 결정적인 개혁, 혁명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라는 용어에 「혁명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말은 「고친다」는 뜻으로 「혁명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격적인 변화는 소련에 있어서의 경제개혁이 다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련지도부가 그만큼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는 반응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부분적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정책이 이어져 나오게된다. 합작기업법(1987년 1월), 개인기업법(1987년 5월), 국영기업법(1988년 1월), 협동조합법(1988년 7월), 농업개혁이 그것이다.

이들 새로운 법은 모두가 시장경제 원리로 가미했거나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련의 새로운 대한정책과 더불어 북한의 강한 반발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소련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은 1987년 1월 소련영내에서의 서방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인가한 것이다.

소련영내에 있어서의 합작기업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1987년 1월 13일에 소련최고회의간부회가 채택한 간부회령 「소련과 제외국의 조직, 회사 및 국제합동조직의 소련영내에서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제문제에 관하여」이다. 특히 자본주의제국과의 합동기업설립의 법적 기초는 동일부의 소련각료회의결정 「자본주의제국 및 발전도상제국과의 소련영내에 있어서의 합작기업의 설립 및 활동 방식에 관하여」에 두고 있다(이들 합작기업설립의 법적 기초가 되는 문서는 1987년 9월 17일의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소련각료회의가 채택한 「새로운 경영조건에 있어서의 대외경제활동에 개선에 관한 추가조치에 관하여」라는 결정에 의해서 수정보완되었다.)

상기 「합작기업법」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서방기업의 출자비율은 49%를 한도로 한다.

② 합작기업의 최고기관은 이사회이며 그 이사장과 총지배인은 소련시민으로 한다.

③ 합작기업의 외자지출은 외국에서의 판매수입으로 한다.

④ 세금은 예비фон드, 각종фон드를 공제한 후에 남은 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납입한다.

⑤ 이익의 해외송금에는 또다시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⑥ 인원은 주로 소련시민으로 구성된다.

⑦ 소련시민의 노동조건은 소련의 법률기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⑧ 합작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그 후 1988년 12월 2일 소련각료회의는 「국영, 협동조합, 기타의 사회기업, 합동, 조직의 대외경제활동의 일층의 발전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공표하였다. 이 결정에는 합작기업에 대한 여태까지의 규제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결정에 따르면 합작기업의 출자비용은 출자자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외국인은 금후 합작기업의 이사장, 총지배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극동지역에 있는 합작기업은 소련의 기타 지역의 2년에 비해 3년간의 세금면제를 받으며 극동지역의 합작기업의 소득세는 10%로 되어 있다.

소련영내에 있어서의 합작기업설립의 인가와 때를 같이하여 1987년 1월에는 대외무역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종래 대외무역성에서만 전담하도록 되어있던 외국과의 직수출입권한이 1987년 1월부터는 22의 省庁과 77의 기업, 합동 및 조직에 직접무역권이 부여되고 신청의 수출입업무는 그 밑에 창설된 외국무역공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 앞에서 지적한 소련각료회의결정 「국영, 협동조합, 기타의 사회기업, 합동, 조직의 대외경제활동의 일층의 발전에 관하여」의 영향을 받아 1988년중에 56의 성청, 모든 구성공화국, 160이상의 합동, 조직에 직접무역권이 부여되어 합작기업수도 1988년이 168건, 1989년 4월까지 418건, 1989년 10월 현재 도합 8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에서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 합작기업은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11월 소련최고회의에서 제정되어 198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기업법의 취지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소규모 써비스업들을 양성화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업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이발관, 이용원, 가구수리업, 자동차수리업, 사진관, 식당 운영등이다.

소련당국은 이와 같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원하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심사후 허가를 해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내든지, 일시적으로 면허를 사도록 되어 있다.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 및 가족에 한하며 그것도 본래의 업무가 끝난 후 여가시간에 개인기업에의 종사가 허용된다.

개인기업의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며, 또 일시적으로 면허를 얻는데 얼마를 내야하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개인기업법은 소련시민들의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해도 역시 페레스트로이카를 집대성한 것은 「국영기업법」이다. 이것은 기업경영의 완전독립채산, 자기자금조달을 규정한 것으로 종래의 「기업은 국가의 지령을 받아 생산하는 기관」이라는 중앙집권령의 경제제도에 근본적인 개혁을 가한 것으로 이것이 완전히 실시되면 소련경제는 시장경제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될 정도의 획기적인 법률이다.

1988년 1월부터 실시된 이 국영기업법은 소련생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영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원조와 구제가 없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장기화되면 그러한 기업은 도산이나 파산을 면할 수가 없다.

기업장, 공장장, 기사장등에 대한 엄명제가 폐지되고 노동단체가 기업경영진을 선거로써 선출할 권리도 부여되었다.

기업은 이전에 반이상(58-60%)의 이익을 세금으로서 국가에 납입하였으나 새 제도에서 국고에 납입하는 세금은 40%로 되어 있다.

기업이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는 기업내보유펀드(基金)는 ① 생산발전·과학기술펀드(설비등 고정자산과 연구개발비등에 충당), ② 사회적 발전펀드(종업원주택, 사나토리움, 휴식소등의 시설건설에 충당), ③ 물질적 장려펀드(임금인상, 할증금, 뽀나스등의 지급에 충당)의 그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상의 기본적인 변혁을 러시아어의 이니시얼을 따서 4개의 에스(S)로 이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즉 ①SAMOSTOYATE L'NOCT'(자주성)②SAMOO-KUPAEMOCT'(자기결제), SAMOFINANSIROVANIE(자기자금조달), ④ SAMOU-

PRVLENIE(자기관리)가 그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국영기업법」은, 1966년 1월부터 실시되었던 코시긴 개혁과 1973년, 1979년에 있었던 부분적인 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의 기업경쟁방식을 보면 말로는 각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좀처럼 완화하지 않았다. 즉 중앙통제기관인 국가계획위원회가 각 경제분야의 해당부처가 매년 소련내의 각 기업소에 생산지표를 지령하고, 어디서 원료를 구입하고 어떤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 까지를 결정했던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기업소가 생산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면 할수록 다음해에는 보다 높은 생산목표를 배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업소는 그 해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서 얻어진 이윤의 거의 전부를 국가에 납입하고 국가는 기업소에 근로자를 비롯한 종업원에 지급할 봉급을 영달하면 그만이었다. 그리하여 기업소가 자체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이 자금은 국가에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취득되는 것의 모든 것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으므로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소이든 그렇지 않은 기업소이든 간에, 이들 기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종업원들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봉급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노동생산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더구나 자기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팔리든 안 팔리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에 나온 국영기업법은 바로 이러한 누적도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소련에서 협동조합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련에는 생산농업 협동조합의 지배적 형태로서 꼴호즈의 정관과 같은 것이 있었으나 여태까지 정식으로 협동조합법으로서 독립된 전연방적인 법률은 없었다. 따라서 소련의 경제개혁에서는 이 법률로써 협동조합운동의 영역과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

국·영부문과 함께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소련경제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론 국영기업법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소비자, 시장의 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꼴호즈를 지배적 형태를 하는 농업, 그리고 공업, 건설, 운수, 상업과 공공급식, 유료서비스의 제부문에서 설립하여 활동할 수가 있다. 즉 모든 분야에서 설립하며 활용할 수가 있다.

경영원칙은 「국영기업법」에 있어서의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완전독립채산과 자기자금조달제에 기초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설립은 소비에트기관, 경제기관, 기타 기관의 특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협동조합설립을 희망하는 시민총회에 의해서 채택된 정관을 협동조합소재지의 지구, 시구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이처럼 새 「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설립환경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설립조건으로서는 희망자 3인 이상, 정관의 제출과 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을 뿐 기타의 제약조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은 농업개혁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은 지난 3월 15-16일에 개최된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의 보고연설을 통해 농민에 대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제도의 도입, 국가농공위원회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이 농업개혁안이 법제화되어 나타는 것은 지난 4월 8일의 소련최고회의간부회령 「소련방에 있어서의 임대와 임대차관계에 관하여」이다.

이 간부회령에 의하면 토지, 건물, 시설 및 기업재산전체의 임대는 통상 5년이상 50년이하 및 그 이상 장기적인 것이 되어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간부회령 말미에는 「소련각료회의는 본령에 기초하여, 그리고 국내의 임대차운동발전의 경험을 고려해서 소련방에 있어서의 임대된 임대차관계에

관한 소련방법안을 준비하여 이것을 1990년 7월 1일까지 소련방최고회의에 제출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던 것이 10월 17일 소련최고회의는 국민에게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하고 농민에게는 임차농지의 상속을 허용하는 법안을 예비심의에서 통과시켜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 법안을 손질하여 최고회의에 이송하여 최종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법제정절차상의 혼선이 야기된 것은 농업개혁이 보다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소련에서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의 농민에의 임대치는 필연적인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귀속」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원칙으로 부터의 이탈인 것이다. 더구나 공산주의의 傳統的인 원칙에 따르면 농지의 집단농장화→국영농장화를 통해서 공산주의사회에 이른다는 것이 正統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농지의 임대와 상속화는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포기할 것이 되는 것이다.

소련경제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사적부분의 확대와 함께 이 농지의 농민에의 임대와 상속화는 북한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

4. 「새로운 思考」와 북한과의 갈등

소련의 국내, 대외정책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새로운 思考」에 입각한 소련의 개방·개혁정책은, 북한이 이를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있음으로써 소련·북한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갈등요인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문제

앞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은 지금 「새로운 思考」에 입각하여 ① 脱 이데올로기를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② 전인류적인 가치를 국가,

제공, 이데올로기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평화공존과는 달리 지금의 평화공존은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 국제관계에서의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새로운 思考」는 도식적으로 「계급혁명론」, 또는 「민족해방론」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는 북한의 주의주장과는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의 경우 남조선의 「계급 혁명론」과 「민족해방론」은 과거 40여년간 북한주민을 탄압·통치하는 명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를 소련처럼 「새로운 思考」에 입각해서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지 않다. 만일 북한의 통치집단이 이것을 양보하는 경우 그들 체제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며 나아가 김일성-김정일후계체제가 동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 한국의 유엔가입문제

아직 비공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한 소련의 기본태도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즉 소련은 ① 한반도에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②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① 한반도에서 통일이 평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2월 한국은 헝가리와 수교를 한데 이어 지난 11월 1일에는 동구권에서는 두번째로 폴란드와 국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유고와도 빠르면 연내에 수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소련에서뿐만 아니라 동구권에서도 한국의 유엔가입등 한반도의 현실인정을 바탕으로한 대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소련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최근의 태도변화에 반발하고 소련은 그러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대북한압력을 가하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일 모스크바방송이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관해 「어느정도

건설적」이라고 논평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평양방송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남조선의 어용언론과 일부사람들은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 어느 정도 건설적인 점이 있는듯이 내돌리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일부사람들」이란 모스크바방송측을 지칭하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스크바방송이 그 다음날인 10월 19일 자체논평을 통해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남북한UN가입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문제는 평양방송이 이례적으로 모스크바방송을 비판했고 모스크바방송은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대북공세를 가했으나,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40여년동안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방안이 심지어 소련으로부터도 다른 시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연방제」를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방제」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을 합법적인 존재조차도 인정치 않고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으로 남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북한이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을 사회주의국가들조차 부정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름든 북한의 남·북한유엔가입을 「두개의 조선책동」이라고 고집하는 한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소련의 「한반도현실인정」과 북한의 「현실부정」은 남·북한유엔가입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교차승인문제에 있어서도 마찰과 충돌을 계속할 것이다.

다. 소련의 북한에 대한 경제개혁 압력

북한은 소련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경제개혁은 북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원리를 가미하거나 도입하는 소련의 경제개혁은 소위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북한에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소련에 있어서의 농지의 농민에의 임대와 상속화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곧 사회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소련의 농업개혁과는 정반대방향에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금년에 들어와서 소련이 대북한경제 관계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한주재 소련을 상대로 A.뜨로피보프는 지난 9월 9일 「이즈베스찌야」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대북한경제관계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에 관해서 피력하고 있는 바 그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난 40년간 소련의 원조로 북한에는 70개이상의 對象이 건설되었는데 이들 기업은 전력, 흑색야금, 기계제작분야에서 선도적인 役割을 하고 있다.

- 蘇聯의 기술원조로 세워진 발전소의 出力의 몫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가공에 있어서는 50%, 화학비료생산에 있어서는 14%이다.

- 北韓의 외국과의 전체 상품유통에서 소련과의 상품유통의 몫은 半이나 차지하고 있다. 소련의 공급으로 北韓의 기계, 설비, 연료,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 그러나 蘇聯-北韓의 貿易-경제관계는 침체되어 있다. 예로서 1985년에 소련의 원료로 건설된 소형 전동기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나 소련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즉 경제원료에 대한 償還으로 완제품의 60%를 소련에 납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전량을 받지못하고 있다.

- 따라서 蘇聯-北韓의 경제관계에서도 페레스트로이카가 필요하다. 새롭고 보다 완성된 協力の 形態는 共同企業을 창설하는 것이다. 共同企業을 만들어 계열생산을 하게되면 상품의 일부를 소련에 공급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데로 이용된 것이다.

이상의 考察에서 명백히 나타나듯이 새로운 思考 그에 입각한 소련의 개방개혁정책은 대북한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특히 소련의 새로운 대한반도정책에 따르는 북한에 대한 평화압력과 소련의

경제개혁에 따르는 북한경제의 개혁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展望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련의 평화압력과 경제개혁압력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5. 北韓의 變化가능성

1987년 9월 日本을 訪問한 소련의 미·카나다 연구소장 이즈바도프는 「세계는 백인가, 흑인가로 단순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호 관련되고 혼합되고 있는 현실에 존립한다는 것-이것이 고르바초프서기장의 새로운 思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사실 소련공산당은 과거 70여년간 世界를 선과 악으로 양분하는 思考方式에 젖어왔던 것이다. 社會主義國家는 무조건 선이고 資本主義國家는 무조건 악이라는 편협된 思考方式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노동자는 무조건 선, 자본가는 악으로 규정하고 자본가의 타도를 효소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부터 소련공산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고 資本主義國가가 하는 일은 모두 악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여기에서 1983년 9월 소련전투기에 의한 KAL기 격추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련이 하는 行爲는 무조건 선이어야하기 때문에 소련은 자기들의 소행을 끝까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客觀的인 증거가 속속 제시되자 마지못해 “첩보비행”을 云云하면서 자기들의 전투기에 의한 KAL기 격추사실을 자체만을 인정하는 데만 무려 6일이나 걸렸던 것이다.

이렇듯 경직되고 획일적이며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소련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서기장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이 살아남기 위해서 공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개혁정책이고 이 개혁정책의 추진을 위해 고안된 것이 「새로운 思考」인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가 「眞理의 독점」, 「권능의 오만함」을 부정하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는 것을 意味하고 상대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또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일단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진리의 독점」, 「권능의 오만함」을 부정하는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를 북한의 통치집단에게 들려주고 있다.

김일성 우상화에서 비롯되는 그의 「전능의 오만함」, 「주체사상」이라는 이름밑에 이루어지고 있는 「眞理의 독점」을 北韓의 통치집단이 버린다면 자기네의 연방제통일방안만이 절대유일의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방송이 지적했듯이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건설적인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北韓은 변화할 것인가? 물론 변화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구를 휩쓴 민주화개혁의 거친 물결이 말해주듯이 북한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처해 있다.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것은 우리 통일정책의 한 책무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 1)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취임연설(1985. 3. 15)
- 2) 김영남의 모스크바방문시에 발표된 蘇聯-北韓 커뮤니케(프라우다, 1985. 4. 25)
- 3) 김일성의 모스크바방문환영 만찬회 석상에서 한 채르넨코 연설(프라우다, 1985. 5. 24)
- 4) 제27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연설(1986. 2. 25)
- 5) 세바르드나제의 북한방문시 발표된 소련-북한 커뮤니케(프라우다, 1986. 1. 24)
- 6) 아세아·태평양국가와의 공동협력에 관한 소련정부성명(1986. 4. 23)
- 7)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1986. 7. 27)
- 8) 김일성의 모스크바방문 환영만찬회에서 한 고르바초프의 연설(1986. 10. 25)
- 9)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인도네시아 “메르데카”지와 의 회견문(1987. 7. 22)
- 10)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결정에 관련한 그라모프의 기자회견(이즈베스찌야, 1988. 1. 13)
- 11) 소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국가위원회 창설(프라우다, 1988. 3. 26)
- 12)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문 (1988. 9. 27)
- 13) 고르바초프서기장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의 연설문(1988. 9. 16)
- 14) “소련외상 A.A. 세바르드나제의 북한방문에 관하여”(프라우다, 1988. 12. 25)
- 15) “신사고와 오늘날의 세계”(프라우다, 1988. 12. 25)
- 16) 제1차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결정서(소련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에 관하여)(프라우다, 1989. 6. 25)
- 17) “조선의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인가”(이즈베스찌야, 1989. 9. 1)

- 18) M. 띠따렌코, “소련의 평화전략과 아시아·태평양정책” (콤무니스트, 1987년 1호)
- 19) G. 또르리아,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극동의 제문제, 1987년 1호)
- 20) 미하일 카피차. 변화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서울올림픽 기념협회, 서울, 1989.)
- 21) 소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익과 수요)(이즈베스찌야 1989. 9. 9)
- 22) 새로운 사고와 지역분쟁(프라우다, 1988. 9. 29)
- 22) 森信茂樹 著. 격동의 소련·동구경제(일본관세협회, 동경, 1985.)
- 24) 小川和男 著.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학(다이몬드사, 동경, 1988.)
- A.G 아간베간 小川和男 역, 소련경제의 페레스트로이카(사이마르 출판사, 동경, 1989)
- 26) 島村史郎 著. 소련경제와 통계(동양경제신보사, 동경 1989.)



일-북한관계의 장래와 남북한 통일 문제

김 용 호 (서울大)

要 約 文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북한 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황 및 장래를 분석하고 일-북한 관계가 남북한 통일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일-북한 관계 연구가 주로 지정학적 시각에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이론적 시각은 유용성이 많지만 또한 여러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1)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너무 중시하는 나머지, 일-북한간의 경제교류나 민간의 접촉의 변화 양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2) 일본내 정치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일-북한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 그리고 북한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3) 동서진영의 대결구조를 강조함으로써 같은 진영내의 경쟁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4) 일-북한 관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강점이 있으나 변화하는 측면을 경시하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시각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제정치 분석의 새로운 이론인 상호의존시각이 일-북한 관계의 장래를 분석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북한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1)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 시기(1953년-1964년); (2) 냉각기(1965년-1970년); (3) 해빙기(1971년-1981년); (4) 모색기(1982년-1988년).

일-북한 관계의 장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일본과 북한의 내부 사정과 주변국가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1) 일-북한간의 국교 정상화가 조만간에 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2) 일-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 (3) 일-북한 관계 개선은 남북한 관계 개선의 진전과, 미국-북한간의 관계 개선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4) 소련과 중국이 대한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일수록 북한 대미, 대일 교섭을 촉진시킬 것이다.

일-북한 관계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남북한 통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대신 일본이 장차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 고찰해보면, 일본이 남북한통일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통일된 한국에서 현재의 남북한 분단과 평화 공존 상

태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것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남북한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현상유지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目 次

I 序論	37
II 日-北韓 關係를 보는 시각	39
1. 지정학적 시각	39
2. 상호의존 시각	41
III 日-北韓 關係의 歷史的 關係	45
1. 한일국교 정상화 이전시기(1953년-1964년).....	45
2. 냉각기(1965년-1970년)	47
3. 해빙기(1971년-1981년)	47
4. 모색기(1982년-1988년)	50
IV 日-北韓 關係의 最近 動向	51
1. 日本의 動向	51
2. 北韓의 動向	54
V 日-北韓 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가들의 태도	57
1. 韓國의 태도	57
2. 美國의 태도	59
3. 蘇聯의 태도	60
4. 中國의 태도	61
VI 日本과 韓半島 統一問題	64
VII 結論	66

I. 서 론

본 연구는 日本-北韓 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의 현황 및 장래를 분석하고 일-北韓 관계가 南北한의 통일 노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日本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정치적, 經濟的, 문화적 교류의 역사가 오래되고 깊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日本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日本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日本이 2차대전에 패망하여 韓國은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 났으나, 美國과 蘇聯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1948년의 南北한 統一 정부 수립의 실패는 日本과 南北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1965년 남한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이룩하고 政治, 經濟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확대해 왔으나 北韓은 日本과 正式 外交關係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남한-일본-북한 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많이 엿보인다. 미국과 소련이 종래의 군비경쟁을 통한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대결이 아니라 새로운 데탕트를 모색함으로써 아시아의 동서진영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蘇聯과 中國은 서방과의 자본, 기술, 貿易交流에 힘쓰고 있고,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편, 동구의 변화는 남북한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 추세 속에서 지난해 盧泰愚大統領은 7·7선언을 통해 共產國家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협조관계를 성숙시키는 새로운 外交政策을 표방하였다. 남한은 中國과 經濟교류를 확대시키고, 헝가리, 폴란드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蘇聯과 다른 동구 國家들에 대한 접촉도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北韓은 우리의 희망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합영법의 제정 등 경제개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근 日本은 南北한관계의 변화 모색과 國際社會의 새로운 데탕트 분위기에 힘입어 대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다가 자민당의 연이은 정치 스캔달과 참의원 선거 참패, 그리고 사회당의 의회 세력 확장, 등 國內政治 상황으로 인하여 대북한 교섭이 주춤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國際社會의 변화와 남한-일본-

북한의 내부 변화가 일-북한 관계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석하고, 일-北韓 관계의 변화가 남북한 통일 노력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II. 日－北韓 關係를 보는 시각

우선 日－北韓 關係를 보는 시각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2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지정학적 시각(Geopolitical perspective)

日－北韓 關係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써 국가간의 경쟁 구조, 즉 동서양 진영의 대결,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 南北韓의 경쟁과 군사동맹 추구 등을 강조하는 견해를 지정학적 시각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시각은 國際政治 연구의 오랜 전통이고, 2차대전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러다임인 현실주의(Realism)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견해가 오랫동안 日－북한 關係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시각에서 日－北韓 關係를 보면, 양국은 근본적으로 적대관계로 존재하고 양국간의 협조나 교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간헐적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경쟁구조가 국제체계 수준이나, 동북아시아의 지역체계 수준이나, 또는 남북한의 경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한 日－北韓의 국교 정상화나 관계 개선은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구조 중에서 어느 수준에서 日－북한 關係를 가장 많이 제약해 왔고, 장차 어느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 나아가만 새로운 관계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번째 견해는 국제체계 수준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즉 오늘날 國際社會의 가장 심각한 경쟁구조로 남아 있는 동서진영의 세력 가축이 日－北韓 關係가 이제까지 전개되어 온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장차 이러한 대결 구조가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 日－北韓 關係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우 단순화시켜 말하면, 미소의 데탕트가 국제체계에 긴장 완화를 가져오고, 이 영향이 동부 아시아에 파급되기 때문에 日－北韓간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또한 關係를 개선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한편 미소의 군사대결이 첨예화한 시기에는 日－北韓 關係에 긴장과 마찰이 많다. 이러한 견해는 신정현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¹⁾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온 日本과 北韓간의 관계를 검토해 볼때 한가지 일반적인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日本과 北韓간의 관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國際情勢와 한반도내의 南北한 관계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 주변 국제환경이나 남북한관계가 고도의 긴장과 갈등을 수반하는 경우 日本과 北韓간의 관계는 소원해졌거나 악화 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주변 國際環境이 긴장 완화나 회해 무드로 나아가고 남북관계가 또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조정, 개선되는 징후를 보인 경우 쌍방관계도 어떠한 형태로든 진전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1950년대의 1960년대에 있어서의 쌍방관계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1970년대의 쌍방관계에서 각각 현저하게 나타났다.²⁾

이러한 견해외에 지정학적 시각중 두번째 견해는 南北한의 경쟁관계를 훨씬 강조하는 입장이다. 南北한과 日本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주로 남북한간의 경쟁의 산물로서, 실제 남북한은 각기 지난 40년간 日本과의 관계가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찌기 北韓은 1950년에 말에 남한이 한일회담을 타결시켜 유리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한편 北韓은 日本이 南北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하도록 애써고, 또 일본내 친북한세력을 구축하며 남한과 日本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여 北韓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미소의 긴장화를 비롯한 국제정세를 무시하지 않지만, 남북한 대결 관계의 청산 없이 일-北韓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발표한 대표적인 학자는 로이이다.³⁾

이러한 지정학적 시각은 日-北韓 관계의 근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중시함에 따라 경제적

1. Jung Hyun Shin, "Japanese-Korean Relations in the 1970s: From a Linkage politics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4: 1(spring-summer1980)

2. 신정현, "북한의 대일관계: 현황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주최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1989. 7. 25-27. 8면.

교류나 문화적 접촉을 설명하는데 제약이 있다. 日-北韓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나 민간 접촉이 계속되고 있고,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동서간의 긴장완화나 남북한의 관계 개선만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70년대 중반이후 北韓의 대일본 채무 지불 지연에 따른 갈등은 地政學的 시각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둘째, 일본과 북한 내 정치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日-北韓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 그리고 연결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 초 다케시타 자민당 정부의 대북한 관계 개선 노력은 자민당의 위기로까지 불리어지고있는 리쿠르트부정사건을 무아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지적이 있다.⁴⁾ 그리고 일본사회당은 자민당과 달리 오랫동안 강한 친북한 노선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최근 상회당의 팔목할만한 세력 신장은 장차 日-北韓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정학적 시각에서는 철저히 고려하지 않는 면이 있다. 셋째, 地政學的 시각은 동서 경쟁구조를 강조함으로써 같은 진영내의 경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日本의 대북 접근은 남한의 대소 접근을 견제 하려는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지적할 점은 지정학적 시각은 日-북한 관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강점이 있으나 변화하는 측면을 경시하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시각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이론을 통해 변화하는 日-북한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2. 상호의존시각(Interdependence perspective)

상호 의존 시각은 원래 현실주의 國際政治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왔으며, 주로 서방 진영내의 國際經濟分野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협력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에 일어난 陣營간의 대결구조의 변화, 蘇聯을 비롯한 중국,

3. Denny Roy, "North Korea's Relations with Japan: The Legacy of war," Asian Survey, 28: 12, (December 1988), pp. 1280-1293.

4. 한영구, "한국의 북방정책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외교(1989년 6월), 45면.

동구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상호의존시각이 서방진영내 국가간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종래 對決關係에 있던 국가들이 協力關係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성을 가진다고 본다. 상호 의존 시각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의 하나는 국가가 國際政治 분야에서 유일하고, 언제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하여 국가간의 貿易, 海外投資, 민간 교류, 비정부간 국제 기구 등이 크게 성장하여, 국가외에 다국적 기업, 國際民間團體 등이 어떤 국제 정치 분야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정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는 국제 정치의 장래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호의존시각이 가진 또다른 전제는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국가간의 분쟁 해결에 군사력이 가지는 효율성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다. 핵전쟁의 경우, 분쟁 당사국들이 가지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군사력의 사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이익 추구에 있어서 군사력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강대국이 모든 國際政治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기 어렵다. 종래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國際社會의 모든 분쟁 해결이 군사적 우위 여부에 귀결되는 連繫政治(Linkage Politics)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호의존이론의 마지막 전제는 국제 사회의 이슈가 다양해지고, 군사적 이슈 뿐만이 아니라 經濟協力과 갈등, 環境保護, 인권 등이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국가간의 軍事同盟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關稅同盟, 경제 협력 등 경제적 협력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복지가 동서 양 진영에 똑같이 중요한 국민의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진 상호의존 시각은 日-北韓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나, 양국의 장래를 전망하는데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

北韓은 이제까지 서방국가와 외교, 무역 부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폐쇄적이었으나 앞으로 開放政策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많다. 이미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을 계기로 신외교정책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⁵⁾비록 매우 느린속도이지만 북한의 開放政策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합작투자의 경우 1988년 말 현재 23개의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가운데는

일본과 합자 경영하는 “낙원백화점”, “성 금속 공장”과 홍콩과 합자 경영하는 “합흥 타이어공장” 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무역총액이 1984년 이래 계속 증가되어 1987년에는 전년비 13퍼센트가 증가하여 35억불을 넘어섰다. ⁶⁾또한 北韓은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생활 필수품 생산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⁷⁾ 그리고 1985년에 북한은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自由市場을 도입하였는데 평양등 도시에는 읍에1개소, 지방에는 군에1개소씩 설치하여 모두200여개의 자유시장이 북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開放政策은 主體思想에 기반을 둔 자력更生 경제 체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완적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공고히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1982년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자력更生의 원칙에서 자주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自立經濟는 다른 나라에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經濟協助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⁸⁾따라서 우리들은 북한의 개방 정책이 蘇聯, 中國, 東歐처럼 빠른 시간에 광범위한변화를 가져 오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영향에서 벗어 날 수 없고, 또한 체제내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北韓 주민들의 중국왕래는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經濟開放政策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北韓은 대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리라고 본다. 이미 북한의 經濟開放政策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서방국가는 日本이다.

-
5. 유석렬, 북한 정책론(서울 : 법문사, 1988), 제4장“정치정세와 개방화 정책” ;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28, No.12, (December 1988), pp. 1264-1279. 참조.
6. Kwan-Chi Oh, “Chunhc vs. Economic Interdependence : Impact of socialist Economic Reforms on North” a paper delivered at the fourth korea-U.S. Conference on North korea, August 8-10, 1989, pp. 11-12.
7. ibid., p. 8.
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 pp.49-50. 유석렬, 앞의 책, 159쪽에서 재인용.

합작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교섭중인 30개 사업가운데 日本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서독의 순이다.⁹⁾비록 日本과의 합작 투자에서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日本이 장차 北韓의 經濟協力 대상 국가가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바이다.

9. 유석렬, 위의 책, 163쪽.

III. 日-北韓 관계의 역사적 관계

日本과 北韓은 여러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北韓은 그들의 對外政策과 統一政策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日本과의 관계개선, 경제교류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日本은 韓國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과 비정치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정치적관계 개선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日-北韓 간에 거론되는 주요 문제는 국교 정상화 문제, 經濟協力擴大, 文化交流, 그리고 재일본 韓國人 문제가 있다. 日本과 北韓은 이러한 문제를 둘러 싸고 여러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 이유로 그 관계의 진퇴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일-北韓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몇시기로 나누어 살펴 보자.

1. 한일국교 정상화 이전 시기(1953년-1964년)

이 시기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 되기 전에 北韓이 日本과의 관계 정상화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던 때이다. 그리고 재일 韓國人 처리 문제가 일본과 협약되었으며 무역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50년대의 北韓은 日本과의 정상적인 관계수립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데, 1955년 2월 25일에 북한 외상 南日이 발표한 다음과 같은 성명이 대일교섭의 기초였다.

“...공화국 정부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는 일체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우선 호상리익에 부합되는 무역관계와 문화적 연계를 설정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 日本이 공화국과 상술한바 제반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조일광국 인민의 절실한 리해관계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극동의 평화 유지와 국제 긴장상태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日本政府와 貿易, 문화 관계 및 기타 조일 관계수립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¹⁰⁾

성명은 北韓이 日本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經濟, 문화적 교류를 적극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55년 3월 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차 회의에서 남일의 연설과 1957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1차 회의에서의 김일성의 연설 등에서 재표명된다.

60년대에 들어 한일 국교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 日本 정부와의 대화를 주장하였다. 北韓은 한일 회담과 관련하여 1962년 12월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북한은 “만약 日本 정부가 현시기에서라도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원한다면 마땅히 北韓 정부와 한국 당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택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3자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¹⁰⁾ 또한 북한은 재일 韓國人 북송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北韓은 1954년 日本 정부에 대한 첫 성명에서 재일 韓國人 문제를 거론한 뒤, 日本 정부와 교섭하여 1959년 양국 적십자 간에 “귀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64년 5월 30일 제117차까지 8만1천여명의 재일 한국인이 북송되었다.

이와 함께 北韓은 日本人의 北韓 초청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1953년 11월 5일 오오야마(大山郁天)로 시작된 日本人의 평양 방문은 진보적인 정치인, 학자, 언론인 및 예술인들에 의해 계속되어 1965년 초까지 약 2천여명이 방북하였다.

한편 北韓이 가장 관심을 갖고 주력한 경제교류는 계속 확대되었다. 日本經濟人과 공식적인 접촉은 1955년 10월 19일에 北韓의 國際貿易促進 위원회 상무위원인 金最善과 일본의 일소무역회 사무이사 다니베 미노루(田邊林)간에 “日-北 貿易 촉진에 관한 의사록”을 교환함으로써 비롯되었다. 1956년 3월 6일에는 대일 貿易에 창구가 된 일조무역회가 日本에 설립되었으나 日本 정부가 北韓과의 무역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간접무역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日本은 1961년 4월 북한을 강제바터지역에 넣음으로 직접무역을 승인하였다. 이어서 1962년 11월에 “수출무역관리규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標準決濟가 가능하게 되었다. 1964년 7월 20일에는 日本 상품을 평양에

10. 로동신문, 1955년 2월 26일.

11. 동아일보사 안보 통일 문제 조사 연구소, 북한 대외정책 기본자료집 2, 1976, 107면.

전시할 것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1960년에 접어들면서 日-北韓간의 무역량은 급격해 증가하였는데 1959년의 수출입 합계가 3백60만불, 60년대에는 4백90만불이던 것이, 61년에는 8백90만불, 62년에는 9백30만불이 되었으며 64년에는 3천1백만불을 넘어서게 되었다.

2. 냉각기(1965년-1970년)

1965년 6월 22일 한일 조약이 조인되자 北韓은 日本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북한은 다음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번 朴正熙○○과 일본정부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은 미제가 〈동북아세아 군사동맹〉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여 남조선을 식민지 예속 상태에 얽매어 놓으려는 음모책동의 일환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¹²⁾

이런 비난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제의하였는데 北韓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일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즉한일 조약 3조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政府는 大韓民國”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北韓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정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北韓의 이러한 입장은 1971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北韓은 재일 韓國人의 교육을 위해 1968년 4월 17일 미노베 동경 도지사로부터 조선대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경제교류는 동시기에도 계속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7년동안에 약2천6백만불 정도의 신장에 머무른 것은 정치적 관계의 약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해빙기(1971년-1981년)

1965년 한일 조약 체결이후 냉각되었던 日-北韓 관계는 197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71년 11월 6일에 日本에서는 초당파적인 “일조우호촉진의원

12. 로동신문, 1965년 6월 24일자.

연맹”이 약2백40명의 중, 참의원으로 결성되었다. 이의 발족은 北韓에 있어서 日本의 사회당과 共產黨에 국한되었던 관계를 집권당인 자민당으로 확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대북교류의 종합창구가 형성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北韓은 1972년 접어들면서 日本과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한일협정의 폐기 의사에 대한변화를 보였다.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은 讀賣新聞 대표단과 회견하면서 “조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한일조약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교가 정상화되면 한일 조약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라고 종래의 입장을 수정하였다.¹³⁾ 동년 9월 8일에 부수상 朴成哲은 日本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한 채로 日本이 北韓과의 국교를 수립할 수 있다. 조일간에 국교가 정상화되면 한일 조약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조약 폐기가 반드시 조일관계 정상화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김일성의 입장을 반복하였다.¹⁴⁾ 이 변화는 北韓이 日本의 韓國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을 남북에 대한 등거리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가 반영되어 北韓과 日本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동안에 일방적이었던 日本 정치인들의 방북에서 北韓 정치인들의 방일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서 玄峻極은 1977년 5월에 대의원 대표단의 단장으로, 1981년 6월에는 “조일우호친선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방일하였다. 日本인의 방북도 활발해져서 1973년 10월 사회당대표의 방북을 비롯하여 1973년 이후 매년 4백명 내지 6백50명 정도가 北韓을 방문하였다.¹⁵⁾

그리고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9월에 “일조문화교류협회”를 일본내에 설치하였으며 문화교류를 위한 협정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9월에 “평양만수대 예술단”이 최초로 일본에서 공연을 가지기로 하였다.

13. 讀賣新聞, 1972년 1월 14일자. 강성윤 “북한의 대일정책과 제현안” 안보연구, (동국대 안보연구소, 1986), 36면에서 재인용.

14. 時事, 1972년 6월 30일, 위의 글에서 재인용.

15. 중앙일보, 1983년 11월 7일자.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개선과 인적, 문화적 교류는 일정한 한계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그것의 주요한 목적은 경제교류의 확대였다. 1972년 1월 18일 구노 주지(久野忠治)를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일조의원연맹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일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무역 촉진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였다. 이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의 무역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그들의 6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기계 설비를 대량 수입하였다. 1974년의 貿易 총량은 3억6천만불이었으며, 日本은 北韓의 貿易 상대국으로서 蘇聯, 중국에 다음가는 자본주의 진영내의 1위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북한 貿易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19일에 북한에 수출되는 두개의 프로젝트에 日本수출입은행의 연불융자적용(총액 5억3천만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北韓의 외화 사정의 약화로 일본에 대한 북한의 채무 지불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對日 貿易은 1978년부터 회복되어 1980년의 무역총액이 5억5천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北韓은 1977년 8월 1일에 200해리 경제 수역을 실시하였다. 동년9월에 北韓의 경제 수역내에서의 일본인들의 조업을 위하여 잠정조치로 “일조어업잠정합의서”가 시한부로 체결되었는데 그후 1978년 1980년에 각각2년간 협정이 연장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종래보다 유화적이었으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사토 내각(1964-1972)에 뒤이어 집권한 다나카 내각(1972-1974)은 김일성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계 개선에 미온적이었다. 1972년 10월 김일성은 “다나카 정부가 평화공존 5개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를 수립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北韓)와의 접촉도 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희망했으나 日本 政府는 아무런 이니시어티브를 취하지 않았다.¹⁶⁾더우기 일본 외상 토시오 기무라는 일-북한 간의 국교 정상화는 “南北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거나, 국제사회가 남북한을 공동으로 승인하여 2개의 韓國에 동의할때 까지”기다려야한다고 천명했다.¹⁷⁾이러한 입장이 이 시기의 자민당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기본노선이라고

16. Masao Okonogi, “The political Dynamics of Japan-North Korean Relation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3, No. 2, (summer 1989), p. 339.

17. Ibid.

보여진다. 미끼 내각(1974-1976)의 경우 미끼 수상이 도쿄-평양간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개인적인 희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4. 모색기(1982년-1988년)

이 시기의 日-北韓 관계는 전시기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지만 몇몇사건을 계기로 양국간에 상당한 갈등을 노출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양국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북한은 1981년 9월에 “조일우호촉진친선협회”를 조직하여 현준국을 위원장에 임명하고 대일관계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듬해 김일성은 “일본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日本이 南과 北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대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¹⁸⁾ 그리고 1983년 6월에 “일조우호촉진친선의원연맹” 회장 구노(久野 忠治)가 방북하여 日-北韓 간의 協力 方案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던 중 1983년 北韓의 랭군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은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대한 북한이 보복조치가 있어 양국간의 관계는 대립적이 되었다. 1885년에 일본이 제재조치를 해제하자 양국의 접촉은 재개되었다. 이러한 양국관계 개선 노력은 1987년에 北韓의 KAL기 폭파사건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은 외교관의 대북 접촉 금지, 北韓 公職者의 日本 入國 禁止, 日本과 北韓 민간인 간의 왕래에 대한 엄격한 審査措置 등 제재措置를 취하였다.

한편 경제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3년에는 총무역량이 4억6천만불에 도달했고, 이후 계속 이러한 수준을 維持해 오고 있다. 그런데 민간어업협정 연장문제로 1982년에 양국은 대립하게 되었다. 일본측의 재연장요구를 북한이 거절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이 日朝友好親善協會 代表단의 入國과 구노가 1982년 4월에 訪北하여 協議된 북한 대표단의 入國을 許可하여주지 않는데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 2년후인 1984년 10월에 비로소 民間漁業協定の 延長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貿易代金 結제問題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北韓은 1981년 5차분이후(즉 82년부터) 연기를 要請하는 등 支拂을 미루어 오다가 결국 83년 이후부터 변제를 하지 않았다. 86년 10월 현재 日本에

18. 환태평양 문제 연구소편, 한국-북조선 총람, vol. 1, 原書房, 1984, 313면.

IV. 日-北韓 關係의 最近 動向

1. 日本의 動向

1987년 北韓의 KAL기 폭발사건 직후 日本의 대북한 제재조치가 있는 후 소원해진 北韓과 日本의 關係는 작년 盧泰愚 大統領의 7·7선언으로 다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日本은 같은해 9월 16일에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9월 23일에 北韓 삼지연호 선원의 상륙을 허가하였다.

日本은 올해 초반에 대북한 노동당 대표단(단장 김양건 당중앙위원회 국제사업부 부부장)의 日本 방문을 허용하였다. 日本 사회당의 초청이었지만 日本 政府가 北韓 노동당의 入國을 허용한것은 처음이다. 특히 日本政府는 종래 北韓인사의 방일에 있어 “정치적 활동은 결코 허용치 않는다”는 조건부 허용과는 달리, 北韓 노동당의 방일에 있어서 “政府로서는 대표단을 받아들일 것은 물론 政治活動禁止 등 일체의 제한 조건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 변화를 보였다. 나아가 日本 政府는 北韓노동당 대표단이 희망할 경우 양국간의 모든 현안에 비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日本 체제시 사회당과의 교류 뿐만이 아니라 자민당 인사와의 교류도 행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올해 3월23일에 日本의 우노 소스케(宇野 宗佐)외상은 중의원에서 日本은 더이상 北韓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南北韓의 분단 고정화의 의도가 없으며, 北韓이 억류하고 있는 제18후지산호 선원의 석방을 위해 무조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3월 30일 다케시다 노보루(竹下 登)수상은 國會에서 종래 사용하던“朝鮮”이라는 호칭 대신에 北韓의 국명, 즉 “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식으로 사용하고 “과거의 불행했던 관계는 유감으로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日本은 北韓에 배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록 國會 답변의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다케시다 수상의 이러한 발언은 日本의 北韓 접근 시도를 政府 차원에서 시도해 보겠다는 최초의 공식 선언이다. 우리가 주목할점은 日-北韓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日本 역사적 과오에 대해 다케시다 수상이 “反省과 遺憾”을 표시한

지불해야 할 北韓의 債務 總額이 약 7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것이다. 이 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시의 공동성명 및 84년 全斗煥 前大統領의 日本 방문이었던 히로히토(裕仁) 전 日本 국왕의 연설과 대체로 동일하다. 결국 다케시다의 공식사과 발언은 北韓이 오랫동안 日本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를 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日本의 대북한 관계 개선 노력은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北韓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日本이 과거 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과와 지금까지 대남한 일변도의 外交政策에 대한 반성을 요구해 왔다. 日本은 北韓의 요구 중 전자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로 사과하였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타케시다의 발언 중, “韓半島를 둘러싼 정세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같은 과거 관계에 관해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싶다”는 대목이 日本의 정부는 韓國 측에 지금까지 대남한 일변도 정책에 대한 유감의 뜻은 결코 담겨있지 않다고 확인했으나, 日本 언론에게는 지난 날의 韓半島 정책에 관한 “반성적 언급”이 들어 있는 것처럼 홀리고 있다.²⁰⁾ 이러한 점은 日本 政府가 韓國과의 관계를 다치지 않고 北韓을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한편 日本 언론은 추측기사를 통해 北韓이 과거 日本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 30억 내지 50억불을 비공식 제의한 것으로 보도하였다.²¹⁾ 자민당정부의 대북한 관계 개선 노력은 日本의 언론 뿐만이 아니라 日本 야당의 도움을 받고 있다. 日本 政府와 자민당은 오랫동안 北韓을 지지하고 접촉해온 사회당을 통해 대화 창구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사회당의 다나베 마코토(田邊 誠) 전서기장이 北韓을 방문하기 앞서 자민당의 다케시다 수상, 아베 신타로(安倍晉太郎) 간사장과 회담을 가지고, 방북시 자민당 대표단의 방북의사를 전달 해줄 것을 요청 받았다. 이토(伊東正義) 총무원장이나 카네마루(金丸 信) 전 부수상을 대표로 하여 자민당 대표단을 구성함으로써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다나베씨는 카네마

19. 조선일보, 1989년 3월 31일자.

20. 조선일보, 1989년 3월 31일자.

21. 조선일보, 1989년 4월 9일자.

루씨가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였다. 처음에는 사회당 대표단의 방북중 日本의 평양 연락 사무소나 貿易 사무소 설치에 관한 논의 등 日-北韓 관계에 새 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리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사회당 대표단의 방북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日本 국내 정치의 양상이 대북한 관계 개선에 日本이 소극적인 자세가 된 원인의 하나로 보여진다. 6월에 日本의 자민당정부는 리쿠르트 스캔들로 디케시다 수상이 물러나고 우노 수상이 집권하였으나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관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총의석 252석중 중저의 142석에서 109석이 됨) 국내 정치에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8월에 우노 수상이 물러나고 가이후 도시키(海部 俊樹)전 문교장관이 수상에 취임했으나 지금까지 대북한 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

한편 日本 사회당은 참의원선거에서 의회 개혁을 확장한후 장래 집권을 위한 걸림돌 제거와 지지 세력 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도이 타카고(土井多賀子)위원장이 지난 9월 중순 종래의 주장인 미일안보조약 폐기에 대한 수정의사를 밝히고, 또“남북한 양정부의 균형있는 관계”를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미 사회당은 韓國의 야당과 접촉한바 있으며, 종래 北韓 일변도 정책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소위 “파친코 정치현금 스캔들”로 인해 조총련으로부터 부정의 政治 현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대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日本 國內 정세가 안정되고 韓半島 내외의 환경이 日-北韓 관계 개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日本 政府는 어떤 방법으로 대북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것인가? 신정현 교수는 日本의 대북한 정상화 노력이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단계에서는 현재의 비공식적 관계를 공식화시키는 조치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쌍방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적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단계에서는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북한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日本내에서의 대북한 관계의 개선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日本 政府는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日本과 北韓간의 공식적인 정치적 접촉과협상을 위한 전초적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세제 단계에서는 日本과 北韓간의 직접 정부간 수준의 협상을 전개하는 관계 정상화의 구체적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단계는 비교적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상당기간의 협상과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²²⁾

2. 북한의 동향

작년 9월 日本이 대북한 제재조치를 해제한후, 10월에 北韓의 經濟 사절단이 日本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北韓은 11월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 平和 統一을 위한 제4회 세계대회”에 조총련 간부를 참석시켰다. 이러한 일상적인 교류외에 北韓의 대일 교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은 위에서 설명한 노동당 대표단의 방일이다. 北韓 노동당 대표단의 방일에 앞서 북한은 1월 11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日-北韓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는 여섯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양국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첫째, 日本政府의 대남한 일변도 정책, 대북한 적대시를 철회할 것, 둘째, 과거 식민지 지배의 잘못을 사죄하고 北韓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 셋째, 1965년 한일조약에서 韓國을 韓半島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을 철회할 것, 넷째 日本政府의 KAL기 폭발사건을 계기로 한 대북한 제재조치를 해제할것, 다섯째, 제9회 아시아 탁구 選手權 대회에 참가한 北韓 선수들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사죄할 것, 여섯째, 日本政府에 의한 北韓 공민(민홍구 하사)구속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행위를 한 일본인의 송환을 해제되었고, 다섯째는 첫번째의 대북한 적대시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게 때문에 北韓이 말하는 장애 요인은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의 네가지로 압축된다. 위에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日本의 반응에 대해 아직 北韓의 구체적 응답이 없지만 종래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라고 밝힌바 있다. 물론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합의에도 도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머지 두가지 장애 요인을 살펴 보면 세제번의 경우, 日本 政府는 1965년 한일 조약 당시 부터 기본 조약

22. 신정현, 위의 글, 10면.

제3조에서 韓國을 “韓半島의 유일한 合法政府”로 인정한 것은 1945년 유엔 총회 결의를 인용해서 확인한 것으로서 이는 남한 지역에서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인정하여 온 것임을 새삼 강조하고 현재에도 같은 입장임을 피력하고 있다. 여섯째 요인인 민홍구하사의 북송문제와 日本 선원의 석방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日本政府는 北韓을 탈출하여 日本에 망명한 민홍구 하사에게 3년간의 특별체류허가를 부여, 석방조치함으로써 일단 해결 된 것으로 간주 하였으나 北韓은 계속 민홍구 하사의 北韓送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日本은 北韓이 스파이 혐의로 억류하고 있는 제18후지산호 선원의 석방을 위해 무조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北韓은 日本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 내기 이전에는 日本 선원의 석방을 하지 않을 것 같다.

日本政府의 대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태도에 대해 北韓은 3월에 부경주재 북한대사 주창준을 통해 日本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4월에 유엔 주재 북한대사 박길연은 日本政府와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4월 4일 김일성과 허담은 다나베 日本 사회당 대표를 만나 日本政府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민당 소속 의원을 공식 초청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배상문제에 대해 日本이 구체적인 행동을 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日本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北韓의 대일 접근이 신중하고 점진적인 원인은 여러가지이지만, 그중에서 北韓의 내부사정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北韓은 대일관계 개선을 통해 자본주의 國家와 경제적 유대를 맺어야 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北韓이 현재 안고 있는 정치적 문제 때문이다. 종래의 고립에서 개방으로 나가야 할 이유는 3가지다. 첫째 北韓의 오랜 맹방이었던 中國과 蘇聯이 사실상 두개의 韓國 政策을 추구하기 때문에 北韓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미 北韓의 맹방이었던 헝가리와 폴란드는 韓國과 수교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진영 전체의 변화이다. 현재 중소와 동구는 물론 베트남까지 현대화를 위해 고립에서 탈피, 자본주의 國家와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다. 北韓은 현재 동맹국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을 극복해야한다. 둘째 北韓은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日本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통제경제로부터 벗어나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세째, 김일성-김정일의 권력 세습을 위해서 이념적 정당성과 아울러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기위해 그를 北韓經濟建設의 책임자로 등장시킨바 아직 실적이 좋지않기 때문에 이를 만회시킬 필요성을 안고 있다. 김정일이 경제를 책임진후 北韓은 日本과 서유럽에 貿易 債務를 갚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침체될수록 김정일의 정통성은 취약해질 것이다. 물론 경제사정만이 김정일의 세습을 안정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점들은 北韓으로 하여금대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하는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對日 政策을 포함하여 과감한 개방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인것이다.

北韓은 오랫동안 극단적인 민족주의아래 자주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되어, 다른 사회주의국가처럼쉽게 자본주의국가와 유대를 맺기 어렵다. 더우기 77세의 고령인 김일성은 아직도 北韓의 對外 政策 결정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 추세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김일성의 가장 큰 관심은 세습체제의 공고화이기 때문에 대외 정책 변화도 이러한 과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北韓은 대일 관계 개선을 포함하여 개방정책으로 인해 “이념적 오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생기면 대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가 될 것이다.

V. 日-北韓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국가들의 태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韓國의 盧泰愚 大統領이 작년에 7·7선언을 통해 “北韓이 美國, 日本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蘇聯, 中國을 비롯한 사회주의 國家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日本은 적극적인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日本은 두개의 韓國政策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日本에서는 日-北韓간의 국교 정상화에 대해 합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순승교수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이룩한후 日本이 추구한 2개의 韓國 정책(two koreas policy)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남한을 유일합법 政府로 인정한다; (2)남한에 대한 인정이 장차 北韓에 대한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3)北韓의 사실상 존재를 인정하고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이 바람직하다. 한편 장달중교수는 日本이 하나의 韓國 정책도 아니고 두개의 韓國 政策도 아닌 애매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도에 존재하고 있는 2개의 政府에 대한 합법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과 2개의 정부간에 똑같은 협정과 교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의 조순중 교수는 日本 政府의 정책 목표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고, 뒤의 장달중교수는 日本 외교의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장차 日本의 대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 목표의 현실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다시 말해 일-北韓간의 국교 정상화는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지극히 당연한 해답은 日本과 北韓의 국내의 사정이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國內外 사정이 관계 개선을 전망하면서 주로 양국의 국내 사정에 국한해서 논의했으나, 양국의 관계 개선이 주변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기때문에 韓國을 비롯한 美-中-蘇의 韓半島에 관련된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

1. 韓國의 태도

日本은 대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위해서 日本이 韓國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 예를 들어 1983년에 日本은 韓國과의 교역을 통해 약 29억불의 흑자를 보았는데 반하여, 北韓과의 교역을 통해 약 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日本은 기본적으로 韓國과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고 대북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日本의 자민당 政府는 현재의 韓半島 政策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결코 日本의 國家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초 日本이 대북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것도 韓國이 지난해 7·7선언을 통해 대북한 정책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韓國은 이제까지 北韓을 고립시키려는 政策을 바꾸어 北韓을 國際 社會에 개방시키려는 적극적 태도이다. 또 日本은 韓國 政府의 蘇聯, 中國 및 동구 사회주의 國家와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北方政策”에 부응하여 대북한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韓國은 지난 2월에 헝가리와, 11월에 폴란드와 대사급 국교를 수립하고, 蘇聯과 中國과의 접촉을 넓혀나가고 있다.

그런데 韓國의 7·7선언이 日本의 대북한 관계 개선의 길을 열었으나, 韓國 政府는 아직 日-北韓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다. 韓國 政府는 日本의 대북한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日本 政府가 적당한 시기에 협의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韓國 政府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1987년 5월 제2차 한일 외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항이다. 당시 구라나리(倉成) 日本 외상은 韓國을 방문하여 日本측의 강력한 희망을 양국외상간의 3개항에 걸친 합의사항으로 만들었다. 그중의 하나가 日本의 대한반도 정책은 美-蘇-中의 그것과 “均衡”을 취해 나가는 내용이다. 결국 지금의 美-蘇-中의 韓半島 政策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대한 日本의 판단에 따라 日本의 대북 접근의 속도가 조절되는 셈이다. 다시말해 韓國 政府는 日本의 대북 관계 설정에 대해 日本의 자발적인 협의에 맡기고 있다. 이 점은 日本이 대북 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韓國이 가진 기득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韓國 政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美國의 태도

日本은 韓國 뿐만이 아니라 美國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日本으로서는 韓國-日本-美國이라는 삼각 군사동맹체제를 무시하면서 대북접근을 시도할 만큼 北韓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日本은 경제대국이지만 美國의 군사보호, 특히 핵우산하에 있는 美國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美國의 대북한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日本은 대북 교섭에 유리하다. 美國은 작년 10월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하여 외교관 접촉, 인도적 商品의 對北한 商業 輸出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북경주재 美國 대사관 관리가 北韓 대사관 관리와 외교적 접촉을 가진 이래, 지난 11월 1일까지 다서차례의 접촉이 있었다. 줄곧 참사관급 회담이었지만, 접촉이 늘어나면서 대화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양측 관리들이 韓國政府가 제안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北韓의 국제 원자력기구 안정 협회 가입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美國과 北韓은 본격적인 대화를 위한 서로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北韓은 (1)美-北韓 협의 채널의 격상; (2)美-北韓간의 직접대화 및 관계 개선; (3)주한미군철수; (4)정진협정의 평화협정 대책; (5)韓國전 참전 美軍 유해 송환을 위한 양국 정부간의 협의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반해서 美國은(1)우선 北韓이 테러를 포기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2)南北대화에 성의 있게 호응하며; (3)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이루어 신뢰를 구축하고; (4)美軍 유해 송환 문제는 양국 政府간의 협의대신 판문점 정전위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말해 美國은 北韓측의 “先미군철수”주장에 반대하고, 北韓측의 “先신뢰구축”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美國의 구체적인 요구는 北韓이 과도한 군사 공격 능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北韓은 美國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갈망하지만, 美國은 北韓이 아직도 호전적이라고 판단하여 대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편이다. 최근 美國의 대북한 접촉은 北韓을 고립상채로 두는 것보다 대화의 채널을 확보해두는 것이 韓半島 안정과 정책수행에 유익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美國의 대북 관계 개선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전망이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美-北韓 관계는 日本의 대북 관계 개선에 제약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蘇聯과 中國의 대한 접근에 비해 美國의 대북한 접근은 상당히 뒤떨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日本이 대북한 접근을 美國의 양해 없이 선불리 진전시키기가 어렵다.

3. 蘇聯의 태도

蘇聯은 서울 올림픽 이후 대남한 접촉에 적극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北韓의 대미, 대일 접근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蘇聯은 여전히 北韓의 동맹국으로서 계속 北韓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시베리아 개발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남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고르바초프 蘇聯 共產黨 서기장점 國家 원수는 韓半島 문제에 언급하여 北韓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군철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蘇聯은 北韓이 제안하고 있는 “3자회담”에 美國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蘇聯의 입장은 蘇聯이 아직 韓國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만, 蘇聯이 종래의 韓半島 政策을 수정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6월에 蘇聯은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韓半島에 사실상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平壤...워싱턴간의 접촉이 韓半島 문제 해결에 유익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蘇聯은 지난 11월 1일 韓國이 폴란드와 수교한 것을 보도하면서 종래의 “남조선”대신에 “韓國”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또 蘇聯은 대남한 관계 개선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日本의 대북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日本을 방문한 이로르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은 “蘇聯은 日本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소련은 대일 협상에 韓國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蘇聯 공산당 정치국원겸 국제정책위원장 야코블레프는 지난5월에 日本이 영토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소 경제협력을 주저할 경우, 蘇聯의 극동지역 개발에 韓國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日本은 2차대전직후 蘇聯이 점령한 홋카이도 북쪽 5개섬을 되돌려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蘇聯의 극동개발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日-蘇간의 현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한 日本의 대북 접근에 蘇聯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北韓은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蘇聯의 北韓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北韓의 대일 관계 정상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中國의 태도

中國은 기본적으로 평양의 맹방으로 北韓의 주장인 연방제 통일안, 추한미군철수, 3자회담 등을 지지하고 韓國에 대한“외교적 불승인”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지난 4월 자오즈양(趙紫陽) 당시 中國 공산당 총서기의 平壤 방문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中國은 장차 日-北韓 관계 개선에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中國 지도자들의 日本 방문 중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지난 4월 日本을 방문한 李鵬총리는 다게시다 日本 수상과의 회담에서 “日本이 北韓과 政府 차원의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中國은 이같은 대화를 측면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李총리를 수행한 錢其深외교부장은 우노 일본수상과의 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趙紫陽총서기가 4월 하순 北韓을 방문하게 되면 中國이 日本 政府의 대북한 관계 개선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말하고, “中國은 이 대화가 결실을 맺도록 측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中國은 지난6월 천안문 사태 이후, 국내정치의 불안으로 인하여 韓半島 政策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日-北韓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정세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日-北韓 간의 국교 정상화가 조만간에 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초 日本과 中共간의 국교 정상화가 美國과 中國간의 비밀 외교에 의한 계 개선으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경우처럼, 日-北韓 관계가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北韓은 中共에 비해 군사적, 경제적 가치가 훨씬 미약하기 때문에

日本은 北韓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섭에 훨씬 수동적이고, 타협의 정도가 약하리라고 전망한다. 즉 日-北韓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日本은 얻을 수 있는 것이 北韓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北韓의 상당한 양보 없이 진전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日本은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해 韓半島 긴장완화라는 군사적 측면 외에 日本 선원의 석방, 北韓이 주장하는 2백마일 경제 수역 조정, 北韓 영공을 지나 동경-북경 간의 항공로 개설, 자본과 기술 진출, 日本 商品 輸出市場 확대등의 이익을 노리고 있다. 日本은 선원의 석방과 어업협정 외에 다른 문제들은 별로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北韓의 입장에서는 대일 관계 개선을 통해 美-日-韓國 간의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고, 日本의 자본적 기술을 도입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두개의 韓國”을 인정하여 통일을 지연시키는 우려를 낳고, 일본의 침투로 인하여 “主體”에 기반을 둔 김일성체제에 대한 오염을 감당해야 한다. 北韓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기 전에 쉽게 대일관계 정상화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日本과 北韓이 일괄타결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부분적인 관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 日本은 美國의 협조없이 대북한 국교 수립을 이루기 어렵다. 美國은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균형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美-日 안보체제와 韓-美 안보 체제를 갖추고 미군이 日本과 韓國에 주둔해 있고, 日本과 韓國은 경제적으로 美國 市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기 때문에 이제까지 美-日-韓國 간에는 군사적, 경제적 협력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은 대북한 관계 개선 노력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美國과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日本이 北韓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동북아시아에서 美國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므로 日本의 독자적인 대북한 국교 정상화를 경계할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대북한 관계는 美國의 대북한 자세와 연관을 갖게 된다. 그런데 北韓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대미 교섭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北韓이 이러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미군 철수 없이는 美國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매우 비관적이다. 이 점이 日-北韓 관계 개선에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시말해 日本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팽

창주의에 대한 北韓의 염려를 씻을 수 있도록 北韓을 설득해야하고, 또한 北韓과 공산주의국가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버리도록 美國을 설득 해야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세째, 日本의 자민당 정권이 단독으로 집권하고 있는 동안 日-北韓 관계의 정상화는 매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日本 자민당의 보수정치인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日本 기업들과 관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韓國내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에 위협이 되는 日-北韓 관계의 정상화에 반대할 것이다. 물론 자민당내에 친북한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수세력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日本은 대북 관계 개선의 명분으로 日本 선원의 석방을 내세우고 있으나 호소력이 약하다. 그런데 韓國에 이해 관계를 가진 日本企業은 北韓에서 상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경우 대북 관계 정상화에 찬성할 지 모르나, 그들은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를 알고 있고 북한의 시장성이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만약 자민당정권이 장차 연립정부를 형성해야 할 경우, 日-北韓관계 개선의 압력은 심해질 것이다.

VI. 日本과 韓半島 統一 問題

日本の 대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韓半島 정책은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남북한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는 통일 방안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北韓은 일찌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韓半島에 2개의 國家를 영속화시켜 통일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입장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남한은 盧泰愚大統領이 7·7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北韓이 日本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호전성이나 도발성을 약화시켜 남북한 평화 공존을 도모하고, 남북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장차 통일로 나아가고 주장한다.

그럼 앞으로 日-北韓 관계의 변화가 韓半島 統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日-北韓 관계의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양국관계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 日-北韓 관계의 장래에 대한 여러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먼저 묘사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에는 日-北韓 관계의 장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따라서 여기서는 日本이 장차 韓半島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日本은 장차 남북한 통일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日-北韓 간의 관계 개선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가까운 장래에 日本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맡을 역할을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日本이 統一된 韓國에서보다 현재의 남북한 분단 상태에서 平和共存이 계속되는 한더 많은 국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日本의 대한반도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분단된 韓國 상황에서 국익을 추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日本의 이러한 정책은 美-日 軍事同盟에 부합되고 日本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현상유지정책의 대안들, 즉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韓半島 무력 통일이든 平和統一이든 日本의 국익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후 日本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남북한 平和 共存을 최상의 目標로 삼았다. 이를 위해 日本政府는 남북한 대화의 擴大, 유엔

동시 가입, 4대강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을 지지해오고 있다.

日本の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統一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의 統一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日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日本政府는 韓半島 統一에 대해 외교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흔히 日本의 정치지도자들은 韓半島 統一問題가 본질적으로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日本을 포함한 제3자의 간섭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韓半島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남북대회가 평화를 정착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VII. 결론

지금까지 日-北韓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시각을 살펴보고, 양국 관계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최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친 국내외 정세를 알아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서 기초하여 양국관계의 장래를 전망하는 의미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들을 정리해보자. 우선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관계 개선과 日-北韓 관계 개선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 개선이 선행되고 후속 조치로 日-北韓 관계 개선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는 國際 環境이 매우 좋은 경우에도 난관이 많다. 남북 대화가 최초로 이루어진 1970년대의 경험이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당시 일본은 대북한 관계 개선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였고, 北韓은 무절제한 플랜트 수입으로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이 오늘날 日-北韓 관계 개선에 신중을 기하는 요인인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남북한 관계는 주변환경이 좋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정권담당자들의 정치적 야심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1972년의 유신 선포와 1973년의 金大中 납치사건 등은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北韓은 1983년 랑군 테러 사건, 1987년 大韓航空 폭파사건 등으로 남북의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韓國은 현재 民主化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나 北韓의 전체주의체제는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있다. 더우기 北韓이 종래에 행한 예측불허의 테러 행위때문에 北韓의 테러가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관계 개선의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불투명성은 바로 日-北韓 관계의 장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北韓의 日本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김일성체제의 기반인 “主體”사상은 日-北韓 관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北韓은 아직 日本의 제국주의를 의심하고 있고, 주체사상은 北韓이 자본주의 국가와 본격적으로 교류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蘇聯과 中國및 동구의 여러 사회주의 國家들이 자본주의 國家의 資本, 技術을 도입하여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수용하거나 정치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반해서 北韓은 主體思想에 따라 비동맹 제3세계국가와 교류하는 수준에 머물어 共產陣營의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점점 소외되고 있다. 물론 北韓은 합영법을 제정하여 20여개의 합작투자를 유치하고, 또 관광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北韓의 主體思想과 日本에 대한 감정이 日-北韓 관계 개선에 극복해야 할 점이다.

세째, 日本과 北韓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양국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자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北韓의 스탈린식 政治 통제는 日本이 원하는 공개적인 물적, 인적 교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日本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北韓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없이 日-北韓간의 관계 개선은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매우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國內外 情勢의 변화로 인하여 日-北韓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요인들도 나오고 있다.

첫째, 韓國은 對北 政策에 획기적 전환을 이루어 北韓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國際 社會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이룩한 經濟를 기반으로 韓國은 올림픽이후 北方政策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국가와 교류를 넓혀 가고 있다. 이러한 北方政策이 성공하자면 종래의 남북한 대결구조를 완화하여 남북한 平和 共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남북 대화에 적극적이다. 韓國의 새로운 對北 政策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 임수경양의 平壤 청년학생축전 참가, 서경원의원 사건 등이 일어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이 종래의 같은 北韓에 대한 경직된 對決政策으로 되돌아 가지 않고 平和共存을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남한의 政策變化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韓半島 긴장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日-北韓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蘇聯, 중국, 동구, 그리고 베트남 등 사회주의 國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北韓체제의 對外政策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본다. 이러한 北韓의 변화가 日-北韓 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다. 北韓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변화에 아직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계속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北韓이 주민의 생활을 철두철미 통제하고 있지만, 이웃 중국으로부터 내왕과 합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北韓은 다른 사회주의 國家보다 느린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開放과 改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北韓의 점진적인 변화는 이웃나라 日本에 대한 開放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1. 오코노키 마사오, 남북한관계의 추이와 일본의 대응 : 동경, 서울, 평양관계의 기본구조,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서울, 1989. 7. 25-27.
2. 신정현, 북한의 대일관계 : 현황과 전망,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서울, 1989. 7. 25-27.
- 미-일의 대북한정책 전망, 정책연구, 94 : 1989, pp. 137-171.
3. 안병준, 북한의 신외교정책, 동아연구,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6.7.
4. Yim, Kwan Ha, The Japanese Role in the Korean Unification process, Asian perspective, 10 : 1, Spring-Summer 1986, pp.164-183.
5. Lee, Hy-sang, North Korea's Closed Economy :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28 : 12, December 1988, pp. 1264-1293.
6. 전인영, 북한의 외교정책 : 지속과 변화, 아세아연구, 32 : 1, 1989. 1, pp. 35-107.
7. 김동원,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격과 경제개혁 전망, 아세아연구, 32 : 1, 1989. 1, pp. 109-146.
8. Wldkimir Andreff,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and Viet Nam, Seoul Journal of Economics, 2 : 1, Mar. 1989, pp. 87-107.
9. 유석렬, 북한정책론, 법문사, 1988.
10. 장달중, "일, 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환경," 한반도 평화와 통일환경 연구,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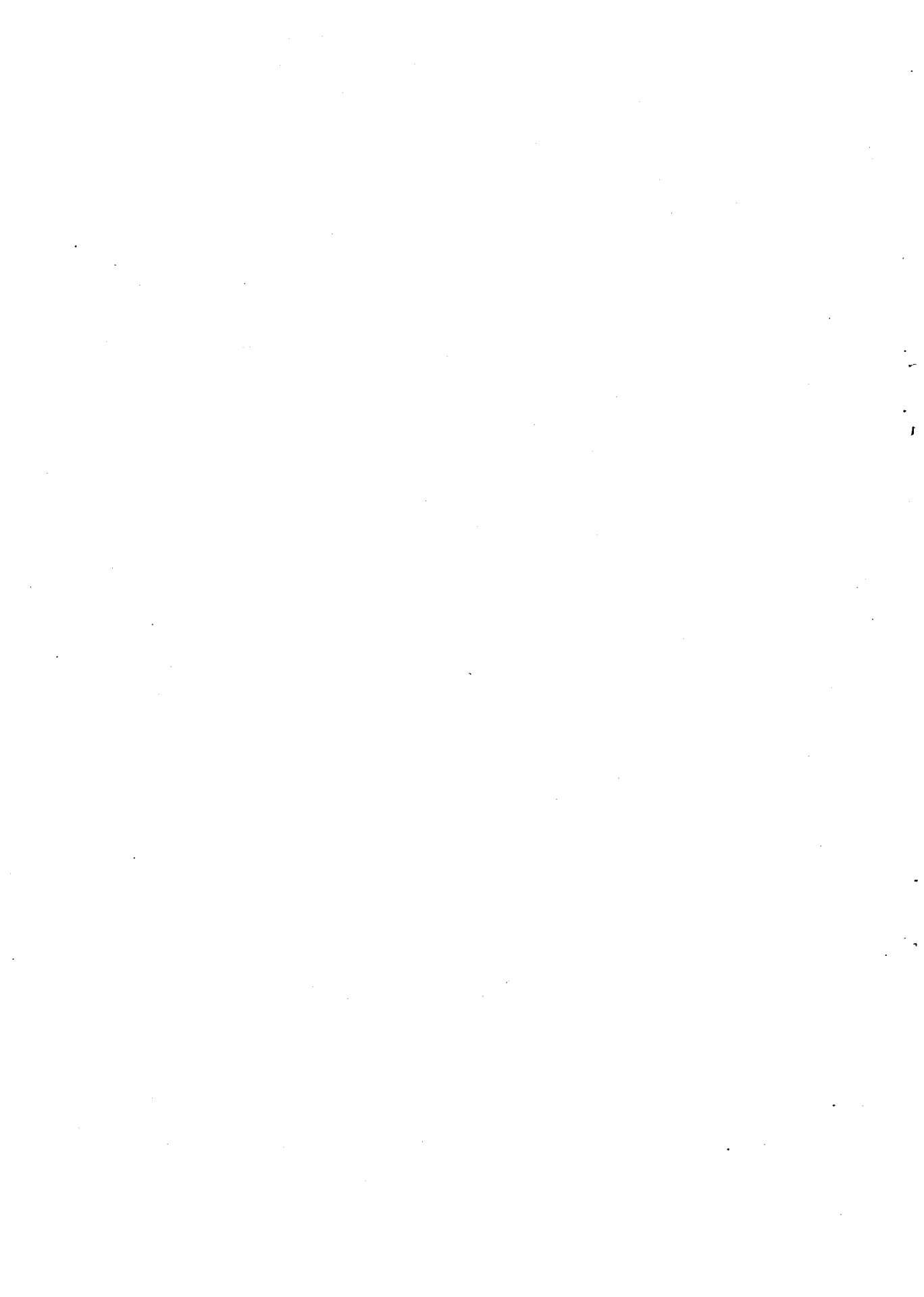
토통일원, 북방정책연구자료 시리즈 II, 1988. 11., pp. 181-128.

11. 박영호, 북방정책과 북한의 대외관계 : 대소련, 중국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북방정책에 관한 특별학술대회, 1989. 8. 24-25.

13. Robert A. Scalapino, "North korean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North Korea Today :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eds. Robert A. Scalapino and Jun-Yop kim (Berkeley, CA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c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14. Koh, Byung Chul,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15. 한영구, "한국의 북방정책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외교, (1989년 6월호), pp. 42-47.



北韓의 周邊環境變化와 統一問題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1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 대우인쇄(주)

〈非 賣 品〉

